

테마칼럼

다성민

박리미

정재희

한민환

시민단체의 재정 투명성



조담

“재정적 기초가 뚜렷하고 건전할 때 대중은 그들 주장의 도덕성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리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운영을 명쾌하게 밝히는 일야말로 시민단체가 대중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 된다.”

지난 8월 하순 뒤늦은 무더위 속, 사회 한 쪽에서 청량한 바람을 보내주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2006년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이 그것이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치내역서가 아니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거친 회계보고서였으며, 앞으로는 매년 회계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도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직해지고 좀 더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좌표로 필자에게 보여졌다.

이 소식을 듣고 필자는 사회의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되는 10여개의 시민단체들의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크게 실망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회원가입 절차나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도 충분한 자료를 제시

해주지 않고 있었다.

한 군대는 최근 한해의 재정수입 규모와 원천을 간단한 원형도표로 보여주고 있었고, 다른 한 군대는 회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지난 한해의 재정수입 규모, 원천, 사용 용도별 구성비 등을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필자가 홈페이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지 못한 것일지 모르지만, 다른 시민단체들은 재정운영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는 어느 누구라도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아 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사회이다. 시민단체는 각자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갖고 설립되며,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대중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고자 하며 때로는 극단적 방법으로 투쟁하기도 한다.

그들이 특정한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 존립목적과 현안에 대한 입장, 활동내용과 성과뿐만 아니라 존속과 활동의 경제적 기초인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회비 수입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누구로부터 얻어졌는지, 회비 이외의 어떤 원천으로부터 얼마가 얻어졌는지,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영

향력이 큰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거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어떤 사람은 시민단체의 재정운영은 단체 내부의 문제이며 외부에 밝히는 것은 단체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깨끗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어떻게 족쇄가 될 수 있겠는가?

시민단체는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존립한다. 그들의 주장이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일지라도, 재정적 기초가 뚜렷하고 건전할 때 대중들은 그들의 주장의 도덕성을 인정하고 그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리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운영을 명쾌하게 밝히는 일야말로 시민단체가 대중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 된다. 이런 생각이 세상모르는 원칙론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이미 시민단체의 도덕성, 투명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시민단체는 그 의심에 대응하여 도덕성, 투명성을 증명해 보여 줄 때가 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를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자.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상의 차기회장 선거 파행 없어야

광주상공회의소가 12일 회장 등 임원 선거규정을 개정했으나 보궐선거 조항을 둘러싸고 불협화음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광주상의는 이날 임시의원총회에서 최근 개정된 임원 선거규정과 상의 정관 등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된 임원선거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리투표자 구비서류를 강화하고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복수선거권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크게 늘리는 등 회원들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보궐선거 조항의 경우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제출할 경우 규제를 할 수가 없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마형렬 현 회장이 오는 15일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에 나설 경우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차기 회장 선거는 잡음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실시됐던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소송까지 가며 3개월 가까이 회장 대행체제라는 파행을 겪었다. 법원과 지역사회의 중재로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되긴 했지만 지역사회와 경제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쳤다. 지역경제는 밑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민간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광주상의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차기회장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지난 선거의 전철을 되풀이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상의를 살리는 길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선거 관련 당사자 역시 지난해 법원 조정에서의 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새 일자리 60%가 경기도에 몰렸더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6년간 새로 생긴 일자리의 60%가 경기도에 몰리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나 균형발전이 걸려있는 것이다.

일자리 지역간 격차 확대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장 시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왔다.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빠져 나가면서 비수도권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은 반대다. 전남의 일자리는 지난해 91만8천명으로 6년 전 98만1천명보다 6.4%나 감소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전북과 경북, 부산도 줄어들었다.

광주는 6년새 11.9%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재차리 결음을 하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수도 1천명 감소하는 등 고용 창출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일자리는 가계소득과 직결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씨잡데 없는' 일에 몰두하다 번쩍 정신이 드는 때가 있다. 읽지도 않는 신문을 무시코 넘기다가 눈길을 잡아끄는 신간 서적 광고 문안도 그랬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 뒤에는 풍부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래의 질문을 보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떠올려라.

△말하기 어려운 고 민거리를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을 떠나게 되어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진급 심사 때 승진 대상으로 나를 확고하게 지지해줄 상사나 선배는? △현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줄 수 있는 외부 인사는? △내가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김찬배, '키맨 네트워크', 다산북스) 저자는 이 여섯 개 질문에 세 명 이상

떠오르는 사람(가족 제외)이 없다면 인생을 헛살았다고 단언한다. 그가 맺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키맨'(Key-man)이란 조직에서 여러 사람에게 두루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인물. 저자가 일러주는 '키맨' 확보 성공법칙은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대하라'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경청하라' '브(give) 앤 테이크(take)의 달인이 되라' 등,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대학 교정에서 연일 체육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냉혹한 현실이 회로 뛰어드는 젊은이

들은 언제 어느 단계에서 '키맨'을 만나게 따라 성공의 속도가 좌우될 것이다. 역으로, 나는 직장에서 후배들을 챙기고 끌어당겨 줄 '키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쯤 냉철한 자기반성으로 되돌아볼 일이다. /경기대 사회부장 meonsan@kwangju.co.kr



기고

이대원



우리는 TV를 통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의 모습을 접하곤 한다. 그들을 보며 때론 눈물을 흘리고, 때론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인식 속 바람직한 장애인의 정의가 '타인의 도움 없이 뭐든 스스로 해내고 무조건 상황을 꿰뚫어 보거나 사람'인 까닭이다. 우리 일상 속 장애인과 관련된 사안은 이슈, 즉 일회성 뉴스거리로 치부되기 일쑤다. 우리에게 장애인은 아직도 특별한 존재, 즉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대상이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정상'인인 '장애'인을 구분하며 허락된 차별

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보다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뜻이다. 아무리 심한 중증 장애인이라도 일방적 수당이나 연금 지급만이 대책일 수 없다. 직업 재활과 고용, 일을 주고 부족한 노동력만큼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의 복지 정책 실행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우리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장애체함을 적극 권해오고 싶다. 체험적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경험은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사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촉진시켜 준다. 중요한 것은 체험의 초점이 '불쌍함'이 아닌 '불편함'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정

을 행해 왔다. 자칭 정상인들은 외적으로 다름난 이유로 장애인을 소수집단의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지었다. 이런 편향된 시각 속에 장애인을 사회의 짐으로까지 비추지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을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 장애의 89%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사회에서 현대 사회적 협조다. 장애인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결정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힘을 더하는 것은 당연히 실천이다.

이해에 바탕을 둔 인정,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받고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의 기본이 바로 장애인 고용촉진임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역시 비호의적 사회 상황 개선을 위한 자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바로 진정한 '정상' 사회 구축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장애인가용촉진공단 광주지시장>

대입 전형료 폭리... 교육부 행정 지도 필요

현재 2학기 대학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실시중인데 전형료가 의외로 비싸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에 이르는 3~4군대를 지원할 경우 수험생의 부담이 들어간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입시원서도 못낼 판이다.

게다가 간단한 면접을 실시하는데도 3만~5만원을 받고 눈송고사라도 실시하면 7만~8만원을 받으며 예체능계의 실기의 경우 10만원까지 전형료를 받고 있다. 과연 그렇게 많은 전형료가 입시에 다 들어가는지 반문하고 싶다.

대학입시는 궁극적으로 대학 학사력의 일부분으로 대학자체에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수험생이 무슨 병인가.

대학은 이제 전형료를 받겠다는 의식을 버리고 자체예산으로 쓰고 꼭 필요한 극히 일부분만 수험생에게 전형료로 받아야할 것이다. 이런 부담한 전형료 징수행위에 대해 이를 감독하고 행정지도도 해야할 교육부는 사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형료 기준을 제시하든지, 부당하게 전용하는 대학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다시는 지나치게 많이 받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장

의로 칼럼

권순석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이미지관리를 위해 각종 통계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강문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문에 지역의 암이나 사망관련 기사만 하나 보도되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지역의 각종 암통계 현황은 어떻게 될까?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 4명중 한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역시 4명에 한 명 꼴로 결국 암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광주·전남에서는 2005년도에 남자는 심장병당 224.2명, 여자는 118.4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암은 65세 이상 노령

개인적인 요인의 기여율이 높기 때문에 폐암통계만으로 지역 환경문제를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지표의 노년층에 일회일비하기보다는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암관리정책을 긴 안목으로 준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WHO는 효과적인 암관리를 위해서 암예방, 조기검진, 그리고 암진료분야에 자원의 1/3씩을 분배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남의 지난해 국가 조기검진 수검률은 21.6%로 전국평균 17.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암전문병원으로서 특성화의 성공사례로 인정

받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인해 때문에 암진료분야의 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원정치료를 가는 경우가 줄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전남은 올해부터 전남지역암센터와 함께 암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말기암환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지원사업, 암등록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암센터와의 연계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광주시도 암관리사업의 강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의 25%이상이 사망하는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회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의무이다.

도감을 준비 중인 군대의 지휘자가 감의 평균수명이 군대의 평균신장보다 길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도감을 명령했다가 군대의 절반이 의사했다는 통계 우화가 있다. 결국 통계란 단순한 수치일 뿐이고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 암이 '얼마나' 발생하지 정확히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천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화순전남대 병원 교수>

추석 귀향길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고 출발

추석 명절, 고향의 품에 안기기 전에 꼭 치러야 할 숙제는 '전정'을 치러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느낌도 '귀향 전정'.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이용한다면 조금이나마 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교통 포털사이트 도로플러스는 출발 전 미리 확인한다면 정체가 시 우회도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속

도로 상에서 정체를 맞이한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ARS 1588-2505, DMB방송, 내비게이션, PDA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실례는 추석명절, 교통체증으로 자칫 고생길이 되기도 쉽다. 미리미리 준비해 편안한 고향길 되도 좋겠다. ▲국성아·한국도로공사 합평영업소

Table with 2 columns: 光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